

2025 년 국제 온라인(인터넷) 사기 피해 현황과
‘국민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아키타시 시민상담센터

소비생활상담원 고다마 준코(小玉 順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만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교토 회의에서는 일본 내 국제 온라인(인터넷) 사기의 피해 현황과 방지 대책에 대해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이후 새롭게 나타난 동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현금 등을 속여 빼앗는 범죄를 ‘특수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4 년 1 월부터 12 월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특수사기 피해는 인지된 건수만 21,043 건, 피해 총액 약 718 억 8 천만 엔에 달했습니다¹.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피해 규모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수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현재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키타시청 소속 시민상담센터에서 소비생활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특수사기 피해를 입은 분이나 피해를 입은 뻔한 분들의 상담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에서 추진 중인 특수사기 피해 방지 대책과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수사기의 새로운 수법

(1) 국제전화 및 자동음성 사기

최근 일본에서는 번호 앞에 ‘+(플러스)’가 붙은 국제전화가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자동음성으로 “귀하의 전화는 2 시간 후 사용이 정지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¹경찰청 조직범죄대책과 제2과 생활안전기획반 ‘2024년(레이와 6년)의 특수사기 및 SNS형 투자·로맨스 사기의 인지·검거 현황 등에 관한 보고 (확정치판)
https://www.npa.go.jp/bureau/criminal/souni/tokusyusagi/hurikomesagi_toukei2024.pdf

원하시면 1 번을 눌러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재생됩니다. 이러한 자동음성은 수신자가 부재 중일 경우,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신자가 1 번을 누르면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 직접 전화를 받아, “전화요금이 미납되었습니다”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있습니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금전 송금을 유도합니다.

표시된 전화번호는 북미 지역 번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둔 특수사기 조직이 발신번호를 위조하여 전화를 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경찰관 사칭형 수법

앞서 말씀드린 전화 사기 유형에서, 특수사기 조직의 구성원은 피해자에게 “귀하의 휴대전화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전합니다. 이후 실제 존재하는 경찰서명, 담당 부서, 그리고 담당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가 해당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합니다. 피해자가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면,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만 그 전화번호는 실제 경찰서 번호와는 다르며, 전화를 받는 사람도 실제 경찰관이 아닌 경찰을 사칭한 사람입니다.

사칭 경찰관은 LINE 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요구하며, 자신의 LINE ID 를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해당 ID 를 친구로 등록하도록 지시합니다. 영상통화 중에는 “귀하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짜 체포영장이나 수사영장 등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이 진짜 경찰관임을 증명한다며 경찰수첩(신분증명서)을 제시하고, 방 안에 경찰 깃발이 걸려 있거나, 경찰관의 제복과 상의, 코트 등이 벽에 걸려 있는 모습을 연출하여 마치 경찰서 내부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이러한 사칭은 경찰관에 국한되지 않고, 검찰관이나 변호사 등으로 신분을 가장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을 PDF 파일 형태로 전송하거나, 가짜 경찰서 홈페이지에 안내받은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체포영장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조작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5 년 들어서는 이러한 전화 기반 특수사기에서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등장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전 지급 방법

금전 지급 수단으로는 약 80%가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며, 그 외에는 암호자산(예: 비트코인)으로의 지불, 택배를 통한 지정된 주소로의 현금 발송, 그리고 사기 조직의 ‘수거책(受け子)’이라 불리는 조직원이 직접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여 금전을 수령하는 방법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특수사기 조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수거책’을 모집하려 해도 불법 아르바이트 단속 강화로 인력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조직은 과거 특수사기 피해자에게 “현금수거책이 되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라고 유인해, 피해자를 다시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ⁱ

(3) 사례 소개

[사례 1] 상담자 • 60 대 남성

휴대전화에 ‘+’가 표시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무슨 전화인지 궁금해 전화를 받자, 자동 음성으로 “귀하의 휴대전화는 2 시간 후 사용이 정지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9 번을 눌러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담자가 9 번을 누르자, 안내자로부터 “신주쿠 서쪽 출구의 휴대전화 매장입니다.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가 타 지역의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경찰로부터 해당 번호 소유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신주쿠 중앙경찰서이며, 담당은 형사 2 과의 A 씨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번호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안내받은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가 ‘0110’이었기 때문에, 상담자는 ‘110’이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 경찰서 번호일 것이라 믿었다.

상담자가 신주쿠 중앙경찰서 형사 2 과로 전화를 걸자 A 라는 인물이 전화를 받았다. A 는 신분 확인을 이유로 신분증 이미지 송부를 요구하였고, 상담자는 운전면허증 사진 데이터를 A 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A 는 “도쿠시마현 내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범인이 사용한 번호가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사기범의 공모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상담자가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으며, 사기 조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하자, A 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면 성의를 보인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하였다. 상담자가 지급액을 묻자 A 는 “우선 피해자에게 100 만 엔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납득하면 피해 신고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상담자는 잠시 고민한 끝에,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보다 100 만 엔을 지불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A 가 알려준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 만엔을 송금하였다.

송금한 직후, A 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A 는 “피해자에게 송금 사실을 통보했지만,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350 만 엔이므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라고 통보하였다. 상담자는 자신의 저축액이 약 150 만 엔밖에 없다고 전하며, “150 만 엔은 즉시 송금 가능하지만, 나머지 100 만 엔은 마련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답하였다. 이에 A 는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먼저 송금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상담자는 150 만 엔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후, 상담자는 나머지 100 만 엔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와 상의했으나, 친구는 “그 이야기는 뭔가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 신주쿠 서쪽 출구 휴대전화 매장과 신주쿠 중앙경찰서는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었으며, 안내받은 경찰서 전화번호 또한 가짜 번호로 밝혀졌다.

[사례 2] 상담자 • 60 대 여성

타 지역 경찰서의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귀하 명의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남성은 “약 10 년간 사용하지 않은 A 은행의 계좌에 수십억 엔이 예치되어 있으며, 사기 혐의가 의심됩니다. 귀하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도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계좌 정보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자신이 보유 중인 B 은행과 C 은행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어 남성은 “B 은행 계좌의 잔액 70 만 엔이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폐국에서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잔액을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락은 LINE 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지시하였다.

상담자가 LINE 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없다고 답하자, 남성은 “수사가 종료된 후에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요금을 경찰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 지정된 기종인 iPhone(구입가 약 11 만 엔)을 구입하셔서 신규 회선을 개설해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상담자는 서둘러 인근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해 단말기를 구입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상담자는 사칭 경찰관과 통화하며 그의 안내에 따라 LINE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이어 LINE 영상통화로 경찰관으로 보이는 인물과 통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여준 경찰수첩과 경찰서 내부로 보이는 배경 때문에 실제 경찰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

먼저 남성은 B 은행의 이체 한도액을 80 만 엔으로 상향하도록 지시하였고, 상담자는 이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상담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인 명의 계좌로 70 만 엔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또 다른 경찰관을 사칭한 인물의 안내에 따라 ATM 을 통해 송금을 완료하였다. 이후, 상담자는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송금한 70 만 엔과 iPhone 구입비, 통신요금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다시 들었다.

그 후 3 일 동안, 사칭 경찰관으로부터 “변동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LINE 통화가 수차례 걸려왔다. 상담자가 “휴대전화 매장에서 단말기 내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정리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이후로는 일절 연락이 두절되었다. 불안해진 상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으나, 읽음 표시조차 없어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했음을 인지하였다.

2. 금융기관과의 연계

(1) 범죄대책 각료회의

2024 년 12 월 17 일, 일본 정부는 범죄대책 각료회의¹²에서 ‘이른바 불법 아르바이트에 의한 강도 사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긴급대책에는 ‘범죄자의 범죄 도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금 추적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 및 회신

절차의 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과 경찰청 간의 '정보연계 협정서'

2025 년 1 월 17 일, 2 월 27 일, 6 월 18 일 그리고 8 월 8 일,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대형 은행 등)과 경찰청 간에 특수사기 등의 피해 확산 방지 및 검거에 기여하기 위한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보연계 협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ⁱⁱⁱ. 본 협정서는 금융기관이 모니터링을 통해 사기 피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래와 계좌를 식별했을 경우, 해당 정보를 관할 경찰 또는 경찰청에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금융청과 경찰청이 금융기관에 공동으로 요청한 '법인 계좌를 포함한 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방지 대책 강화'의 일환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강화'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3) 연계에 따른 효과

피해자가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이 의심되어 금융기관이 모니터링 중이던 계좌였던 경우, 송금 직후 수취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금융기관이 경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례 1] 상담자 • 40 대 여성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업체가 지정한 동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부업을 알게 되어 참여하였고, 이후 업체의 안내에 따라 '컨설턴트 비용' 명목으로 30 만 엔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하지만, 송금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송금처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귀하가 송금한 계좌가 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당행에서 해당 거래를 일시 보류 중입니다. 즉시 경찰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라고 안내했다. 상담자는 즉시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고, 은행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송금된 30 만 엔 전액이 본인 계좌로 환급되었다.

[사례 2] 상담자 • 50 대 남성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투자 모임에 가입한 상담자는, 유명인을 사칭한 강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100 만 엔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송금처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상담자는 즉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은행에 연락하였다. 그 결과, 송금한 100 만 엔 전액이 본인 계좌로 환급되었다.

3.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

(1) 범죄대책 각료회의

2024 년 12 월 17 일, 일본 정부는 범죄대책 각료회의를 열고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매개로 한 특수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강도 사건까지 잇달아 발생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아르바이트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나 구인 애플리케이션에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가 혼재되어 있거나, 온라인 게임의 채팅을 통해 불법 아르바이트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고액 보수의 아르바이트가 있다.” “해외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와 같은 메시지로 유인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권유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관이 가공의 인물에 대한 허위 신분증을 사용해, 불법 아르바이트에 직접 지원하여 범행 조직에 접근하는 ‘가상신분 수사’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iv}.

2024 년 12 월 17 일 각료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v에서 무라카미(村上) 총무대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①SNS 사업자에게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촉구하는 대책, ②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모집자의 이름이나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이용자에 대한 주의 환기 조치를 요구하는 대책, ③스마트폰 통신 애플리케이션 중 ‘시그널’ 등 일부 앱이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에 악용되어 범죄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통신서비스를 관할하는 입장에서 범죄대책에 필요한 지속적 협력을 추진하는 대책이와 더불어, 총무성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히어링)^{vi}도 개최하여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을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을 논의중입니다.

4. 국제적 연계

(1) 피해금 추적 및 회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

2025 년 4 월 22 일, 일본 정부는 범죄대책 각료회의^{vii}를 열고 피해금 추적과 피해 회복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①금융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 ② 암호자산의 몰수 및 보전을 위한 법적 정비 ③SNS 사업자의 조회 요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본 내 법인 창구 설치를 촉구하는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환경정비 ④ 통신 기록의 보존 의무화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⑤국제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 년 3 월, 영국과 EU 가 공동 개최한 ‘합법적 접근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여, 각국 정부기관 및 테크놀로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합법적 접근 유지의 중요성과 과제,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 일본은 G7 등 국제적 협의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암호화된 콘텐츠 등 관련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외국 수사기관과의 수사 공조 및 협력

일본 정부는 국경을 초월한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및 해외 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의 신속한 추적과 환수를 위해 ICPO(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수사 공조, 외국 FIU(금융정보분석기관, Financial Intelligence Unit)^{viii}와의 정보 교환, 외교 경로 및 관련 조약·협정을 통한 국제적 수사 공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관련 정보를 조기에 입수·분석하고, 몰수 및

추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로 이전된 범죄 수익을 신속히 특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협력의 성과

2025 년 8 월 20 일, 캄보디아 내 특수사기 거점에서 일본인 29 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ix}. 해당 거점은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의 제보를 통해 밝혀졌으며, 아이치현(愛知)경찰은 외무성 등을 경유하여 캄보디아 현지 수사 당국과 협력하여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현지 수사 당국은 같은 해 5 월 해당 거점 시설을 수색해 일본인 29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사당국은 거점 시설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일본 경찰관 제복과 유사한 물품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피해구제 방법-은행 계좌 동결 조치

(1) 이체사기 피해구제법

이체사기 피해구제법^x은, 이체사기 등의 범죄로 부정 송금된 자금이 남아 있는 ‘범죄 이용 예금계좌’의 잔액을 피해자에게 분배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경찰과 송금처인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계좌의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피해금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될 수 있지만, 잔액이 1,000 엔 미만이거나 피해금이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예금보험기구의 공고^{xi}

피해자는 예금보호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송금한 은행 계좌가 이미 동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동결된 경우에는 신청 기한과 절차, 대상 은행의 연락처 등이 함께 공지됩니다. 피해자는 안내에 따라 직접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支払督促)’을 이용한 계좌 동결 방해

지급명령이란^{xii},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나 ‘외상대금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간이법원에 소정의 신청서와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만을 근거로 간이법원의 서기관이 상대방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지급 명령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금전 분쟁을 서면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특수사기 조직이 피해자가 동결한 계좌에 대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계좌를 압류하여 계좌 동결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실제 피해 사례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송금 계좌의 동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에 남은 잔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xiii}’가 허위 지급명령을 신청해 동결된 계좌를 압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절차가 악용되면서, 사기 피해금이 특수사기 조직에 의해 전액 회수되고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사기 조직은 지급명령 제도를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하여 피해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간편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급명령 제도의 특성이 역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지급명령에 따른 압류가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며, 일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대리인인 아라이 데쓰로(荒井 哲朗)변호사의 블로그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분량이 많아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URL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xiv}.

(5) 피해회복금부금 지급제도(검찰청)^{xv}

‘이체사기(보이스피싱)피해구제법’ 외에도 ‘피해회복금부금 지급제도’라는 피해 회복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2006 년 12 월 1 일부터 사기죄나 고금리 수령죄(출자법 위반) 등 재산범죄를 통해 범인이 취득한 재산(범죄피해 재산)은, 해당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이른바 자금세탁이

수반된 경우에 한해 형사재판을 통해 범인에게서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몰수나 추징한 범죄피해 재산을 현금화하여 ‘급부자금’으로 보관하고, 그 자금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피해회복급부금 지급제도’입니다. 또한, 외국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해 몰수된 범죄피해 재산을 일본 정부가 양도받은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 동결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특수사기 사건에 대한 제도의 적용 여부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급부금 지급절차 개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특수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활동

(1) 유선전화를 매개로 한 사기 피해 방지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 피해의 상당수는 유선전화를 통해 시작됩니다. 특히 고령자 가정의 전화는 번호표시 서비스(넘버 디스플레이)나 발신번호 비표시 수신거부 서비스(넘버 리퀘스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기 전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일본의 주요 통신사들은 특수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0 세 이상의 가입자 또는 70 세 이상의 동거 가족이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설치비와 월 이용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xvi}.

(2) 국제전화를 매개로 한 사기 피해 방지

최근 발생하는 특수사기 사건 중에는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앞에 ‘+’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국제전화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전화를 받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평소 국제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국제전화 수신 거부 설정^{xvii}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본인이 계약한 통신사에 직접 연락하여 설정해야 했지만, 지금은 유선전화 이용자도 ‘국제전화 미취급 접수센터’를 통해 손쉽게 수신 거부 설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특수사기 전화 체험^{xviii}

경시청 특수사기대책본부를 비롯한 각 현(県)의 경찰 본부에서는, 실제 특수사기 조직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음성이나 영상통화 화면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의 말투와 설득 방식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유사한 유형의 전화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사기 전화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4) 유동형 특수사기 조직^{xix}에 의한 방문판매 주의 환기

‘도쿠류(トクリュウ)’라 불리는 유동형 특수사기 조직은 기존 특수사기 조직과 밀접한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실행 부대로서 다양한 범죄 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관여한 방문판매, 그 중에서도 악질적인 주택 리폼(주택 개·보수)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을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진다”, “기둥이 썩어서 위험하다” 등 불안을 조장하여 즉시 공사를 진행한 뒤, 고액의 공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는 대체로 부실하게 시공되어 비용에 상응하는 품질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인력의 상당수는 인터넷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을 통해 동원된 인력으로, 주택 공사나 수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비전문가입니다. 이들이 받은 공사비는 결과적으로 특수사기 조직의 자금원으로 이용됩니다.

또한 도쿠류가 주택 리폼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내부와 외부를 확인하면서 출입구, 방의 배치, 가족 구성, 방범 카메라의 설치 여부 등을 세밀히 조사합니다. 이후 돈이 될 만한 물품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도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동 지역에서는 도쿠류에 의한 강도 피해가 여러 건 발생하여 사상자까지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방문판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생활 강좌’를 열어 방문판매원이 찾아왔을 때의 대응 요령과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해야 할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 년 10 월부터 경찰청 내에 도쿠류의 수사 및 집중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인 ‘익명·유동형 범죄조직 단속 타깃 수사팀’^{xx}, 약칭 “T3”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본 각지의 경찰서에서 선발된 약 200 명의 전담 수사관이

법령을 적극 활용하여 이른바 톱다운형의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텀업 수사와의 연계를 통해 조직 자체와 비즈니스 모델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사기 피해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각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방지와 문제 해결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ⁱ 특수사기 피해자, 권유 받아 사기에 가담한 혐의, 나고야에서 용의자 체포(NHK 도카이 NEWS WEB, 2025 년 07 월 24 일 11 시 36 분)

<https://www3.nhk.or.jp/tokai-news/20250724/3000042743.html>

ⁱⁱ 2024 년 12 월 17 일 개최된 범죄대책 각료회의. 이른바 ‘불법 아르바이트’에 의한 강도 사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국민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follow-up)를 포함)

https://www.kantei.go.jp/jp/singi/hanzai/kettei/241217/kinkyu_taisaku.pdf

ⁱⁱⁱ 경찰청·특수사기 등의 피해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과의 ‘정보연계 협정서’ 체결에 대해 2025 년 8 월 8 일

<https://www.npa.go.jp/news/release/2025/20250804001.html>

금융청·특수사기 등의 피해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과의 ‘정보연계 협정서’ 체결에 대해 2025 년 6 월 18 일

<https://www.fsa.go.jp/news/r6/sonota/20250618/20250618.html>

[협정에 참가한 은행 등]

2025 년 1 월 17 일 주식회사 유초 은행 · 2025 년 2 월 27 일 PayPay 은행 주식회사 · 2025 년 6 월 18 일 주식회사 미즈호은행, 주식회사 미쓰비시 UFJ 은행, 주식회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주식회사 리소나은행, 주식회사 사이타마리소나은행, 주식회사 간사이미라이은행, 주식회사 미나토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주식회사·2025 년 7 월 23 일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주식회사, 미즈호신탁은행 주식회사, 노무라신탁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UI 은행 · 2025 년 8 월 8 일 주식회사 세븐은행, 소니은행 주식회사, 라쿠텐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온은행, 주식회사 다이와넥스트은행, 주식회사 로손 은행, 주식회사 SMBC 신탁은행, 오릭스은행 주식회사, GMO 아오조라넷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SBI 신생은행

^{iv} 불법 아르바이트 단속 ‘위장 신분 수사’란, 정부가 긴급대책 결정(NHK NEWS WEB, 2024 년 12 월 17 일 19 시 39 분)

<https://www3.nhk.or.jp/news/html/20241217/k10014670011000.html>

‘위장 신분 수사’ 일본 전역에서 첫 실시, 사기사건의 용의자를 검거 경시청 (NHK NEWS WEB, 2025 년 6 월 9 일 11 시 58 분)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609/k10014829721000.html>

v 총무성 홈페이지 무라카미 총무대신 각의 후 기자회견 개요(2024 년 12 월 17 일)

https://www.soumu.go.jp/menu_news/kaiken/01koho01_02001402.html

vi 총무성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 관련 과제 대응 검토회’ 제 8 회 디지털 공간 정보 유통 제도 워킹그룹(2025 년 6 월 15 일)

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digital_shokadai/02ryutsu02_04000542.html

총무성 홈페이지 불법 아르바이트 대책 관련 플랫폼 사업자 대상 간담회 총괄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1016417.pdf

vii 2025 년 4 월 22 일 개최 범죄대책 각료회의. 국민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2.0(개요)

<https://www.kantei.go.jp/jp/singi/hanzai/kettei/250422/gaiyou-1.pdf>

‘국민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등의 관련 대응 현황 (개요)

<https://www.kantei.go.jp/jp/singi/hanzai/kettei/250422/gaiyou-2.pdf>

viii 일본의 FIU ~ 경찰청 산하의 ‘범죄수익이전방지대책실(JAFIC)’이 FIU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x 캄보디아 특수사기 거점에서 검거된 일본인 29 명, 이송 중 기내에서 체포 (NHK NEWS WEB, 2025 년 8 월 20 일 21 시 44 분)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820/k10014898471000.html>

x 정식 명칭은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에 관한 자금으로 피해회복분배금을 지급하는 법률’

xi 예금보험기구 ‘공고 사무의 개요’

※일본의 공적 기관에서는 ‘업무’를 ‘사무’라고 칭합니다.

https://www.dic.go.jp/yokinsha/page_002043_00006.html

예금보험기구 ‘이체사기구제법에 따른 공고’ <https://furikomesagi.dic.go.jp/>

xii 법원 홈페이지 ‘지급 명령’에서

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minzi/minzi_04_02_13/index.html

xiii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는 등기가 되어 있고, 법인번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수사기 사건의 송금 계좌에는 개인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도 존재합니다. 특수사기 조직 내에는 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설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특수사기 조직이 관련되어 설립된 법인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xiv ‘거짓 신청으로 동결 계좌 압류 “지급명령”제도 악용 사례 (NHK NEWS WEB, 2025 년 1 월 30 일 10 시 05 분)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130/k10014707301000.html>

아오이법률사무소 블로그 ‘동결예금에 대한 부당한 집행 사례에 대해’ 아라이 데츠로 (荒井哲朗)변호사(2025 년 1 월 21 일)

https://aoilaw.com/blog_case/%E5%87%8D%E7%B5%90%E9%A0%90%E9%87%91%E3%81%AB%E5%AF%BE%E3%81%99%E3%82%8B%E4%B8%8D%E5%BD%93%E5%9F%B7%E8%A1%8C%E4%BA%8B%E6%A1%88%E3%81%AB%E3%81%A4%E3%81%84%E3%81%A6/

xv 검찰청 홈페이지 ‘피해회복급부금지원제도’. 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kensatsu.go.jp/higaikaihuku/>

xvi NTT 동일본·NTT 서일본에서 제공하는 번호표시(넘버 디스플레이) 및 비통지거부(넘버 리퀘스트)서비스. 70 세 이상이거나 70 세 이상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계약자가

대상이 됩니다.

<https://faq.ntteast.co.jp/kb/ja/article/%E3%83%8A%E3%83%B3%E3%83%90%E3%83%BC%E3%83%BB%E3%83%87%E3%82%A3%E3%82%B9%E3%83%97%E3%83%AC%E3%82%A4%E3%81%8A%E3%82%88%E3%81%B3%E3%83%8A%E3%83%B3%E3%83%90%E3%83%BC%E3%83%BB%E3%83%AA%E3%82%AF%E3%82%A8%E3%82%B9%E3%83%88%E3%81%8C%E7%84%A1%E5%84%9F%E5%8C%96%E3%81%A8%E3%81%AA%E3%82%8B%E6%9D%A1%E4%BB%B6%E3%82%92%E6%95%99%E3%81%88%E3%81%A6%E3%81%8F%E3%81%A0%E3%81%95%E3%81%84%E3%80%82?categoryId=cidpt6svr0h8a9ni1nn0>

경찰청·SOS47 특수사기대책 페이지 ‘유선전화 번호표시·비통지 거부 서비스’

<https://www.npa.go.jp/bureau/safetylife/sos47/case/service/>

^{xvii} 국제전화 이용계약의 이용정지 신청(이 페이지에는 각 통신회사의 연락처도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kokusai-teishi.com/>

국제전화 미취급 접수센터 전화번호 0120-210364

경찰청·SOS47 특수사기대책 페이지 ‘함께 막자, 국제전화 사기’

<https://www.npa.go.jp/bureau/safetylife/sos47/case/international-phone/>

^{xviii} 경시청 특수사기대책본부 ‘특수사기 근절 프로그램·도쿄’. 사기 조직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음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ction.digipolice.jp/>

아키타현경 특수사기 최신 수법. 사기 조직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음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olice.pref.akita.lg.jp/kenkei/sp-fra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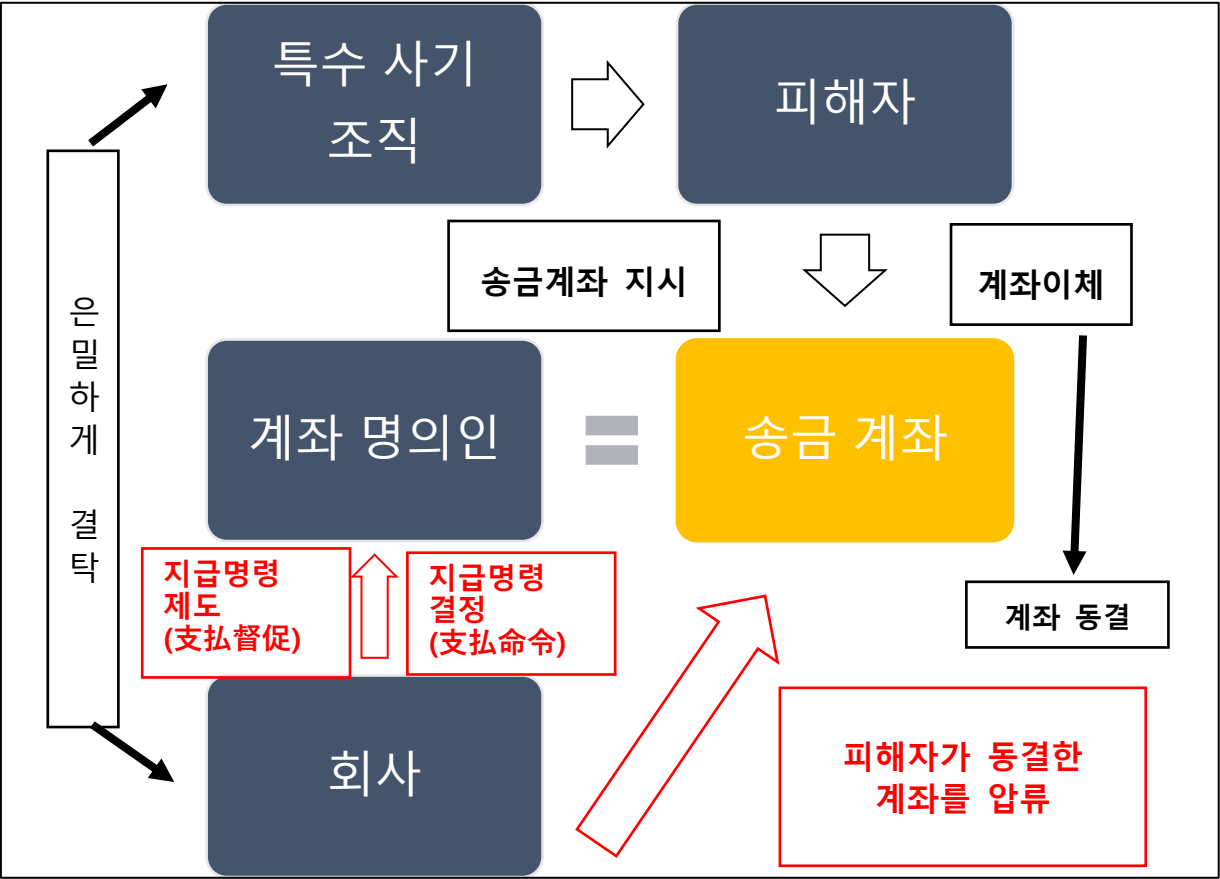
^{xix} 도쿄도 홈페이지 ‘익명·유동형 조직(통칭 도쿠류)’ 도쿄도 생활문화국 도민안전종합대책 본부

불법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도쿠류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합류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상담처 등의 정보 게재.

https://www.seikatubunka.metro.tokyo.lg.jp/tomin_anzen/chian/bouryokudan/bouhaiibent/0000002306

^{xx} 경찰청 ‘도쿠류’ 수사 집중 단속을 위한 새로운 체제 출범(NHK NEWS WEB, 2025 년 5 월 22 일 17 시 50 분)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522/k10014813051000.html>



지급명령에 따른 압류 (도표 설명)